

■ 지금 여기 ■

여전히 지속되는 라이시테를 둘러싼 갈등(프랑스)

박 단

I.

《호모미그란스》(e-Journal *Homomigrans*) 8호가 나온 후 프랑스에서 일어난 최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다양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지만, 필자의 눈에 띄는 사건은 대략 프랑스 내 소수자에 관한 기사들이다. 하나는 무슬림과 관련된 기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집시에 관한 기사들이다. 필자는 지금 집권 여당이 사회당인 것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해 기존 우파 정권과 조금은 차별성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사들을 읽어 보았다. 서로 다른 두 정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사회당의 사르코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회당 정권의 내무부 장관 마누엘 발스(Manuel Valls)의 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헝가리 이주민 출신의 사르코지와 에스파냐 이주민 출신의 마누엘 발스는 적어도 이민자 문제에 관해서는 커다란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현장>을 공표하고, 모든 학교에 이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라이시테 가치를 교육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먼저 이미 지난 정권부터 계속되어 온 부르카 금지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프랑스 내 한 사건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현장>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II.

우선 부르카 금지와 관련된 글을 소개해 보자. 파리 근교에서 2013년 7월 ‘부르카 금지법’과 관련된 커다란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다수의



국내 신문에서도 이 사태를 다루었기에 일단 편의상 국내 신문을 이용하여 사태의 전말에 대해 알아 보고, 그에 대한 논의들이 어가기로 하겠다. 일단 《동아일보》 7월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원어 표기 및 일부 문구 수정은 필자)

“프랑스 파리 교외에서 이슬람식 얼굴 가리개(Burqa) 단속 등에 대한 반발로 폭력 사태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파리 남서쪽 이블린(Yvelines) 지역의 트라프(Trappes) 시에서 20일 밤 차량 20여 대가 불타고 시민 4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프랑스 경찰 관계자가 밝혔다. 이 사건은 18일 밤 한 시민이 얼굴 가리개를 한 아내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그는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밤부터 이슬람교도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 300여 명이 트라프 경찰서 인근으로 몰려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트라프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며 진압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14세 소년이 눈에 충상을 입고 경찰관 4명이 다쳤다. 시위는 주말 내내 계속됐으며 20일 새벽에는 자동차 한 대가 경찰서로 돌진하기도 했다. 르몽드지는 “엘랑쿠르나 기앙쿠르 같은 인근 지역에서도 버스 정류장과 거리에 세워 둔 자동차가 불에 타는 등 폭력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누엘 발스(Manuel Valls) 내무장관은 국내 무슬림 존중과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경찰을 늘려 배치했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 4월 얼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한 이후 ‘특정 종교를 노린 적대화 정책’이라는 이슬람교도 측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얼굴 가리개 착용을 강요한 사람은 3만 유로(약 44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리개를 쓴 여성은 소액의 벌금(150유로-22만원)을 내거나 시민의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 파리 교외에서 대규모 시위 사태가 발생한 것은 2005년 경찰에 쫓기던 청소년 2명이 변전소에 숨었다가 감전돼 죽으면서 촉발된 시위 이후 처음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설, 즉 해당자의 남편이 가해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르몽드》에 따르면, 경찰이 부르카를 쓴 카산드라(Cassandra)라는 21세의 유부녀의 신분증을 검사하면서 그녀에게 “여기는 카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남편인 20세의 미카엘(Michael)이 개입하여 경찰관을 목조르려고 함으로써 구속되었다. 하지만 다른 목격자는 경찰이 남편을 자동차 본넷에 얹드리게 하고 부인의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남편 혹은 경찰의 가해 논란으로 시끄러워진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부르카 금지법이 회자되면서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랑스에서 왜 일명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1989년 프랑스 우아즈 도(道)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시작된 ‘히잡 사건’은 20년이 지난 2009년에 ‘부르카 사건’으로 ‘진화’하였고, 2010년 7월 하원에서 그리고 같은 해 9월 마침내 상원에서 부르카, 니캅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프랑스공화국에서 무슬림 여성의 전통 복장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도 처음에는 라이시테(laïcité) 원칙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차후에는 ‘여성의 존엄성’, 심지어는 공공안전(sécurité publique) 문제로 변모하고 있다. 2010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부르카 착용 금지법의 통과나 현재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집시라 불리는 로마(Roma)의 대규모 추방 등도 공공안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프랑스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라고 생각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2009년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르카 착용에 대하여 여성의 굴종이라는 측면을 전면에 내세우며, 부르카 착용이 “프랑스공화국 영토에서는 환영받지 못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철창 뒤의 죄수가 되면서,

모든 사회생활에서 단절되고, 모든 정체성을 박탈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프랑스공화국이 ‘여성의 존엄성’을 중요시한다는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프랑스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부르카를 언급하면서 ‘히잡 사건’ 당시 논쟁의 핵심이었던 라이시테뿐만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 그리고 공공안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물론 온몸을 휘감으며 눈 부위마저 망사로 가리고 있는 부르카는 최근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히잡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사실, 히잡 논쟁 당시 불거졌던 라이시테의 규범으로는 공공장소(l'espace public)에서 성인의 옷차림을 규제하기 쉽지 않다. 성인 여성의 부르카 착용은 라이시테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르카의 착용 금지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보수여당은 중도파와 더불어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수 여당은 사회당과 달리 길거리에서조차 부르카 착용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회당은 만일 부르카를 공공장소에 금지시켜야 한다면, 정부청사, 병원, 공공교통수단 등 일부 장소에서만 금지시키기를 원하였다. 즉, 이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시청이나 기차역 혹은 은행과 같은 일부 보호받아야 할 건물에서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보안상의 문제가 가장 명백한 이유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무슬림에 대해 갖는 의식은 무슬림을 전쟁, 테러의 주범으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서구인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그 전에는 일단 부르카를 입은 채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려하기도 하였다. 2011년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사실 이 법이 엄격히 지켜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르카 착용이 엄격히 규제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언급한 트라프 사건이 2013년 7월에 일어남으로써 이 법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III.

2013년 하반기에 들어와 프랑스 교육당국은 갑자기(?)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헌장>을 공표하였다. 교육부장관 뱅상 페이용(Vincent Peillon)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급 내에 ‘헌장’을 부착하고 교사가 이를 해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헌장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헌장>

국가는 학교에 공화국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파할 사명을 위임한다.

1. 프랑스는 나눌 수 없는, 종교중립적, 민주적 그리고 사회적인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법 앞에서 온 나라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앙을 존중한다.

여전히 지속되는 라이시테를 둘러싼 갈등(프랑스)

2. 종교중립적인 (프랑스) 공화국은 정교분리 국가이다. 국가는 종교적 신념이나 정신적 신념에 대해 중립적이다. 프랑스에는 국교가 없다.
3. 라이시테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개개인은 믿거나 혹은 믿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라이시테는 공공질서를 지키는 한 그리고 타인의 신념을 존중하는 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허락한다.
4. 라이시테는 공공 이익에 대한 고려 속에서 모든 사람의 평등과 박애를 각 개인의 자유와 조화시킴으로써 시민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5. 공화국은 학교 내에서 이 원칙들 각각이 존중되는 것을 보장한다.
6. 학교의 라이시테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유 의지를 행사하며, 시민권획득을 준비하게 하는 조건들을 제공한다. 이는 모든 과도한 포교활동과 학생 개개인의 독자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압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7. 라이시테는 학생들에게 공통의 문화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한다.
8. 라이시테는 공화국의 가치와 신념의 다원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학교가 순조롭게 기능하는 한도 내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허락한다.
9. 라이시테는 모든 폭력과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에 기초한다.
10. 학생들에게 라이시테의 방향과 가치 및 공화국의 다른 기본 원칙을 전달하는 것은 모든 교직원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학교 내에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데 신경을 써야한다. 이 라이시테 현장을 학부모들이 알도록 하는 것도 교사들의 소관이다.
11. 교직원들은 엄격한 중립의 의무가 있다. 즉, 교직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
12. 교육은 종교중립적이다. 다양한 세계적 관점과 넓고 정확한 지식을 가능한 한 가장 객관적으로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주제도 학술적이고 교육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사전에 배제되지 않는다. 어떠한 학생도 교사에게 교과목의 문제를 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혹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울 수 없다.
13. 어떠한 것도 공화국 학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종교 소속을 우선할 수는 없다.

14. 공립학교에서, 내규에 적시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 공간들의 규칙들은 라이시테를 존중한다. 학생들이 종교적 소속감을 가지적으로 나타내는 복장이나 표식의 착용은 금지된다.
15.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찰이나 활동에 의해 학교 내에서 라이시테가 유지되는 데 공헌한다.

사실, 이 현장은 갑자기 발표된 것은 아니었다. 페이용 장관은 2012년 이미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현장>을 발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 현장은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정 종교에서 터부시 하는 학교급식 음식(예를 들면 돼지고기) 제공 문제나 혹은 크리스마스과 같은 종교축제 등의 문제는 교묘히 회피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명분으로 수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을 상기하고 있다. 대체로 이 내용은 2004년 ‘종교상징물 착용 금지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9년부터 프랑스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1994년, 2003년 주기적으로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히잡문제는 마침내 2004년 3월 15일 모든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실제적으로는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논란이 일단락 된 바가 있다.

그러면 왜 지금 학교에서의 라이시테 문제가 다시 강조되는가? 일부에서 평가하듯이 “대체로 학교는 잘 기능하고 있지만, 소수의 학교는 여전히 공동체화(communautarisé)되거나 인종그룹화(ethnicisé)”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한 생물교사는 “진화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코란과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여 백지를 낸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교육부는 ‘현장’을 각 학급에 부착하고 설명하는 것 외에, 2015년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서까지 라이시테 가치(la morale laïque)의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치 제3공화국 초기 라이시테가 처음 도입될 당시로 되돌아간 듯하다. 페이용 장관은 “학교는 라이시테의 가치를 가르치고, 그 의미를 설명하며, 그 역사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것을 교육하지 않으면, 미래에 라이시테 가치 등이 무시되고 잊혀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이 현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중도과정당인 민주독립연합(UDI)의 회장인 장-루이 보를루(Jean-Louis Borloo)는 이 현장을 훌륭한 텍스트(bon texte)로 평가하며, 시의 적절하게 공표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극우정당인 민족전선의 대표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실질적 효과 없는 ... 홍보용 손짓”일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정부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말하며 이는 정부의 나약함을 내 보일뿐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라이시테 준수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입장은 여전히 정파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하지만, 모두가 어느 정도 라이시테 준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의 입장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IV.

프랑스에서는 내년 3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뿐만 아니라 5월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치는 국민의 감정을 먹고 산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사회는 무슬림 이민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이민정책을 대표적인 정강으로 내세우는 민족전선이 약진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013년 10월 남동부의 작은 도시 브리볼에서 민족전선 후보는 1차 투표에서 40.4%, 2차 투표에서 53.9%를 얻어 낙승했다. 또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24%의 지지를 얻어 대중운동연합 22%, 사회당 19%을 앞지를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다. 이 모두를 무슬림 이민자와 연계할 수는 없지만, 무슬림 이민자와 밀접한 연계가 되어 있는 부르카 문제, 라이시테 문제가 프랑스 사회에서 계속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서강대학교 dahn@sogang.ac.kr